

비민주적 반노동자적 총선방침을 바로잡자! 민주노총 임시 대의원대회에 부쳐



오늘 민주노총 임시 대의원대회는 민주노조 운동의 역사에서 중요한 한 장으로 기록될 것이다. 노동해방과 평등사회 건설을 목표로 출범했던 민주노총이 신자유주의 정치세력을 공식적으로 지지할 것인지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날이기 때문이다.

집행부는 국민참여당과 합당한 통합진보당을 비례대표 투표에서 배타적으로 지지하고, 또 그 통합진보당이 전면적인 야권연대를 통해 단일화한 민주통합당 후보를 지역구 투표에서 연대후보로 지지하는 총선방침을 밀어붙이고 있다. 집행부는 조직 내부 반론과 의결 절차를 무시하고 구 민주노동당 당권파의 정치노선을 따라 국민참여당과 민주통합당에게 면죄부를 주려고 한다. 민주노총이 비민주적이고 반노동자적인 총선방침을 바로잡아 민주노조 운동의 정신을 되살리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는 오로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대의원 동지들의 판단에 달려 있다.

민주통합당과의 무원칙한 야권연대를 반대한다

민주노총 총선방침은 '진보정당의 약진과 진보 민주세력의 집권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정세 인식 하에 의회권력 교체(여소야대)와 진보정당의

원내교섭단체 구성을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총선방침은 민주통합당과의 전면적인 선거연합을 전제하는 것이다. 그 결과 '노동 의제 전면화'라는 민주노총의 목표는 오히려 민주통합당과의 야권연대라는 수단에 종속된다. 이는 역으로 민주노총의 요구안을 희석시키거나 변질시키는 동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단적으로 비정규직 문제를 보자. 민주통합당은 파견법 폐지 대신 현행 파견법의 부분적 개정을 제시하고 있다. 설령 민주통합당의 공약대로 파견법이 개정된다고 해도, 불법파견으로 인정받기가 사실상 어렵다면 말짱 도루묵이다. 3월 10일 민주통합당·통합진보당이 합의한 <범야권공동정책합의문>에는 '불법파견 금지'라고만 언급되어 있다. 민주노총 요구를 반영하여 파견법 폐지를 당론으로 삼고 있던 통합진보당의 입장이 야권연대 결과 실제로 유지되고 있는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의 문제는 제대로 거론되지도 않고 있다.

또한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은 '한미 FTA 폐기'가 아니라 "이명박 정권이 체결한 한미 FTA의 시행 반대"로 합의했다. 한미 FTA가 아니라 MB FTA 반대 수준으로 합의한 것이다. 한미 FTA 체

결을 주도했고 국회비준을 방조한 뒤 곧이어 등원을 결정한 민주당의 기회주의적 행태를 볼 때, 설령 여소야대와 정권교체가 실현된다한들 이들이 한미 FTA를 폐기할리는 만무하다. '좋은 FTA'를 위한 재협상은 이명박 정부도 추진 중이다.

민주노총의 총선방침은 아무런 원칙도 근거도 없는 야권연대가 아니라 한미 FTA 폐기, 노동법 전면 재개정, 비정규직 문제 해결 등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와 노동유연화 정책에 반대하는 분명한 기초와 목표를 설정하고 그에 걸맞은 투쟁 전선을 구축하는 것으로 전면 수정되어야 한다.

통합진보당은 민주노총의 배타적 지지대상이 될 수 없다

국민참여당은 참여정부 시절 한미 FTA를 체결하고 비정규직법을 개악하고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필수공익사업장 파업권 제한을 골자로 하는 '노사관계 로드맵'을 주도한 세력이다. 이들과의 통합을 주도한 민주노동당 당권파는 국민참여당이 과거 참여정부 시절 추진했던 신자유주의 정책을 반성하고 있으므로 통합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강변했다. 수적으로도 민주노동당이 다수를 점하므로 국민참여당을 충분히 제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2면으로 계속**

하지만 결과는 어떠한가? 국민참여당의 합류로 말미암아 통합진보당의 강령에는 진보정당이라고 할 때 응당 포함되어야 할 반신자유주의 또는 반자본주의적 지향이 대폭 후퇴하거나 제외되었다. 당명에서도 '노동'이라는 단어가 사라져 버렸다. 대신 노동을 복지의 하위 개념으로 배치하고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노동정책을 추진하겠다고 한다. 총선 주요 공약도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복지국가와 경제민주화'이다. 민주통합당과의 차별성을 찾아보기 힘들다. 노동 중심성을 상실하고 신자유주의와 자본주의를 넘어설 전망을 밝히지 못하는 통합진보당은 민주노총의 배타적 지지 정당이 될 수 없다.

더욱이 최근 며칠간 우리는 대단히 실망스러운 통합진보당의 모습을 지켜봐야 했다. 이정희 대표 선거캠프의 야권단일화 경선 여론조작 사실, 비례대표 후보 선출 및 순번 배정 과정에서의 부정 시비들, 성폭력 은폐 의혹이 제기된 정진후 전 전교조 위원장의 비례대표 공천, 성주행 전력 후보에 대한 부실 검증, 현직 지방의원의 사퇴 후 총선 출마 등

결코 개인의 과오로 치부할 수 없는 행태들이 속속 드러났다. 진보를 표방하는 정당으로서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진 것이다. 보수 세력들은 물 만난 고기마냥 진보의 위선을 고발하는 십자포화를 퍼부으면서 진보진영 전체에 대한 냉소와 환멸을 부추기고 있다.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원칙을 바로 세우자

그러나 통합진보당은 성폭력 전력 후보자가 개인적으로 사퇴 의사를 표한 것 외에는 대체로 큰 문제 될 것이 없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이정희 대표는 “문자는 당원 200여 명 정도에게 보낸 것이라서 용퇴가 아닌 재경선을 선택하는 것이 보다 책임 있는 자세”라며 사퇴를 거부했다. 대표단도 사태의 본질을 경선불복으로 규정하고, 이정희 대표가 후보를 사퇴하면 오히려 야권연대가 무너져 자신들의 당선 가능성이 작아진다고 판단했다. 당 내에서도 보수세력의 정치공세에 대해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는 식으로 이정희 대표를 두둔하는 웅

호론이 주류를 형성하고 있다. 통합진보당은 후보자 개인의 당선과 정파적 이해관계에 집착한 결과 진보정당으로서 지녀야 할 최소한의 도덕성과 자정능력을 상실하였다. 이는 근본적으로 원내교섭단체 실현과 연립정부 구성을 위해 신자유주의 세력과 무원칙한 야권단일화조차 불사하는 통합진보당의 정치노선이 불러온 필연적인 결과다. 민주노총이 이러한 통합진보당을 비례대표 투표에서 배타적으로 지지하고, 또 이들이 야권연대로 단일화한 민주통합당을 후보를 지역구 투표에서 연대후보로 지지하는 것은 민주노조 운동의 역사를 거꾸로 돌리는 것이다.

총선방침은 민주노총의 요구 실현에 동의하고 노동자 정치세력화 원칙에 입각해 활동하는 정당 및 정치세력과의 연대와 협력, 지지와 지원을 강화하는 것으로 전면 수정되어야 한다. 대의원들의 책임 있는 논의를 통해 집행부의 비민주적이고 반노동자적인 총선방침을 바로잡고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원칙을 다시 세우자.

죽음의 장사판! 서울핵안보정상회의 반대한다!

3월 25일 서울 도심에서 반전반핵 투쟁을 펼치자

오는 3월 26-27일, 서울에서 핵안보정상회의가 열린다. 이 회의에는 약 40개국 정상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핵안보정상회의는 세계평화를 위해서 반드시 막아야 하는 것은 '핵 테러'라고 한다. 핵 테러 예방은 중요하다. 하지만 '핵 테러 예방'은 미국과 핵보유국의 핵 패권을 유지하기 위한 명분일 뿐이다.

핵테러 방지 = 평화위협!

어떻게 핵테러를 막을 예정인지 한번 보자.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이라는 국제협약이 있다. 이 협약은 해상이나 상공에서 대량살상무기를 싣고 있다고 의심되는 선박과 항공기를 세워서 검색, 나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때 군사력 사용도 가능하다. 의심만으로 다른 나라의 선박을 세우고 나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만약 남한이 북한의 선박에게 PSI를 들어 그렇게 한다면, 이는 전쟁의 확실한 빌미를 제공하는 것이다.

핵안보정상회의는 우회적인 방식으로 PSI의 제도화를 추구한다. 국제법적으로 논란이 있는 PSI를 제도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하는 안보리결의안을 전면적으로 이행하지는 내용이 워싱턴 회의에서 발표된 작업계획에 나와 있다.

게다가 오바마는 테러리스트를 지원하거나 허용하는 행위자에게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하고, 이와 함께 핵 비확산 의무를 지키지 않는 국가들은 핵무기로 선제공격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이 말하는 핵테러 방지는, 테러를 저지할 것 같은, 혹은 테러리스트가 있을 것 같은 국가들



을 제재하고 압박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정책은 전쟁의 위험을 높이고 평화를 위협할 뿐이다. 지금까지 이뤄졌던 테러와의 전쟁이 테러를 없애고 세계를 보다 평화롭게 만들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핵무기도 안 줄이고, 핵발전소는 더 늘린다?

현재 전세계에 핵무기는 최대 20,500기가 존재하고 있다고 한다. 핵발전소는 전세계에 441기가 있다. 군사력을 동원해서 이 수많은 핵무기와 수많은 핵발전소를 지키기보다, 다시는 사용되어서는 안 될 핵무기를 없애고, 한번 사고가 나면 돌이킬 수 없는 핵발전소 가동을 중단하는 것이 훨씬 현실적이고, 더 빨리 세계평화를 실현하는 길이다.

하지만 서울 핵안보정상회의에서는 핵무기를

갖고 있는 나라들이 핵무기를 줄이는 문제에 대해서는 논의조차 하지 않는다. 게다가 한국은 이번 회의에 맞춰 핵산업 시찰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이걸 보고 한국의 핵발전소를 사가라고 하는 것이다. 후쿠시마 사고로 핵발전의 위험성이 만천하에 드러났는데도, 여전히 핵발전을 유지하고 확대하려고 하고 있다.

죽음의 장사판! 핵안보정상회의 반대한다!

'평화서밋'이라며 핵안보정상회의를 홍보하면서, 제주 강정마을에 미 해군기지를 세우기 위해 구럼비 바위를 폭파하고, 키리졸브 훈련같은 대규모 군사훈련을 계속하는 이명박 정부의 꿈을 폭로하자. 핵안보정상회의는 평화서밋이 아니다. 평화를 위협하고 죽음의 장사판을 벌이는 핵안보정상회의를 반대하는 투쟁을 펼치자!